

축산물수급, 가격정책의 진로는?

- ... 이 내용은 지난 4월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보현)에서 개...
- ...최한 축산물가격 정책협의회 내용중 주제발표와 협의내용을 본지가 취재...
- ...한 것이다. ...

주제 1. 육류가격정책의 개선

지 설 하 (농수산부 축산국장)



우리나라의 축산물소비는 1960년도의 국민 1인당 육류소비 3.5kg 계란 33개 우유 1.1kg에서 1979년도에는 육류 11.3kg 계란 112개 우유가 9.9kg으로서 무려 9배의 신장을 가져왔으며 특히 소득탄성치가 높은 우유와 쇠고기의 소비가 급신장하므로써 이의 원활한 공급으로 위해 생축과 육류의 수입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 육류수입은 국내육류가격형성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유발하였고 사육의욕을 저하시켜 자급화의 생산기반을 취약케 하였다.

또한 가격형성면에서도 소, 돼지등의 생산가격은 시장자율기능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으나 소비자 가격만은 정부의 행정지도로 경직화되어 육류유통구조상의 모순을 가져왔다.

따라서 정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현행 가격제도를 개선하여 연동가격제로 전환 실시케 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수 있도록 가격연동제를 실시케 되었다. 이 가격연동제실시의 의의로는

가. 생산가격안정으로 사육의욕 고취

- 한우의 가격하락은 타가축가격의 하락을 유발하여 농가소득에 크게 영향한다.
- 돈육은 우리나라 육류수요의 52%를 차지하고 있어 주기적인 불황은 양돈업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한다.
- 돈육, 계육 계란은 국내자급 능력이 충분하여 쇠고기와의 가격차를 유지케하여 쇠고기 수요가 돈, 계란, 계육 수요로

대체되도록 유도한다.

나, 쇠고기 편중소비를 돈, 계육으로 대체 유도

○동일소득 수준에서 일본과 비교시 쇠고기 소비량이 일본의 1.5배나 되어 쇠고기 편중 소비현상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쇠고기와의 상대가격차를 확대시키는 가격정책이 요구된다.

○돈육은 육류소비 구조상 가장 비중이 큰 품목으로 현우리나라 육류수요의 52%를 공급하고 있으나 약32개월을 주기로 찾아오는 양돈불황으로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작년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불황은 심각한 국면을 초래하고 있다.

○돈, 계육은 국내자급여력이 충분하므로 과잉되지 않도록 생산조절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금반 쇠고기, 패지 가격연동제 실시로 쇠고기와의 가격차를 유지하므로써 쇠고기수요가 돈, 계육수요로 대체되도록 유도하여 축산의 안정되고 균형있는 발전이 이룩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다. 육류수입의 지양(육류의 자급화)

'76년부터 부족 우육을 수입 충당함에 따라 제기된 문제를 보면

첫째, '76년에 700M/T의 우육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78년도에는 우육총소비량의 40%인 40千M/T을 수입충당 함으로써 한우사육두수 감소와 한우육의 만성적인 불황현상을 초래하였다.

둘째, 부족한 우육을 수입하여 국내산 한우육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결과 특히 우육을 선호하는 우리국민에게 우육소비를 더욱 자극하게 하므로써 편중소비를 더욱 촉진하였고 우육의 대체육인 돈, 계육의 수요감퇴를 가져와 양돈, 양계산업의 위축과 불황을 가져왔다.

셋째, 특히 한우가격의 하락을 위시하여

양돈, 양계의 불황을 초래 하므로써 농가소득 감소와 사육의욕의 저하 내지는 축산업의 위축으로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와같이 육류수입이 축산업에 미친 악영향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육류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 되어야만 할 것이다.

라. 행정지도가격의 불합리성 시정

생축가격이나 지육경락가격은 육류의 수요공급원칙에 의거 수시변동되고 있으나 정육의 소매가격은 행정지도가격으로 통제하므로써 수시변동되는 생산가격과의 괴리를 유발 유통구조상의 모순을 가져왔고 정육점의 가격위반과 폭리, 소비자의 가격 불신, 농가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주제 2. 물가정책과 축산물가격

박혜경 (숙명여대 교수)



국내생산이 만성적으로 부정상태에 놓여 있는 축산물을 싼가격으로 충분한 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을 해야 된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의 토지를 개발하여 초지로 바꾸어 우리나라 국민이 요구하는 육식의 수요를 자급으로 충족시키는 길이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고 또 외국에서 비싼 사료를 들여다 사육해야 되는 현실적에서는 국

내자급이 장기적 시일을 요구하므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수입을 해야 된다.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부족분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전통적인 생산지원과 중간상인에 대한 단속으로 공급의 부족을 메우려 하거나 가격의 안정을 기하려고 하면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식료품소비의 고급화 내지 수요증가로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족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경우 국내생산자는 물론 대체재분야의 생산자까지 그들의 소득손실에 대한 불만이 대단할 것이다. 그래서 수입최고기가 늘때마다 농가에서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축산정책의 어려움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가중 120만호(전농가의 1/2)가 축산농가(쇠고기)라고 볼 수 있으나 농가당 사육두수는 불과 1~2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 농가의 전수입을 축산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불과 1~2두의 소에 의한 생산자라기 보다는 다른 소비재의 소비자로서의 생활이 더 많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된다. 그렇게 되면 수입에 의하여 최고기값을 내릴 수 있는한 내리고 이로 인한 물가상승을 막는 것이 현명한 소비생활이 된다.

주제 3. 육류가격과 축산물수급

윤 효 직 (건국대 교수)

상위 중진국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에 있어 축산정책의 당면한 중요과제는 축산물의 수급균형과 가격안정 및 유통합리화에 있다.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첫째, 가격억제 및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양하고 생산기반조성정책위주로 정책전환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생산자에게 유리한 수취가격을 보장하여 증산을 위한 유인(incentive)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생산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오늘날 축산물



은 식량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며 식량의 무기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수입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잉생산의 경우, 수매가격은 기업농의 경우 평균생산비를 보상해 주어야 하며, 소농의 경우 그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자가노동보수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종래와 같이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다 하며 수입에 의존할려는 자세는 버려야 할 것이다.

둘째, 수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단기의 축산물 수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축산물의 장단기 수급계획을 발표케 함으로써 년례행사와 같은 과잉생산 또는 과잉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가격 및 시장정보 체계를 강화하며 지역적 수급불균형과 가격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권장 또는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신에 입각하여 가격폭동시보다 가격폭락시에 장래의 증산을 지속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1974년도의 비육사업이라던가 1978년도의 비육돈증산 등 가격이 폭등하자 행정력을 동원하여 증산을 권장한 다음해에 이들 증산이 이루어져 가격이 생산비이하로 폭락하였으나 정부수매가격은 가격안정대 하한선에 훨씬 미달하고 수매량도 적어 농가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행정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결코 물가당국이 축산물가격 상승시에 억제 및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강행하려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세째, 시장구조에 있어 축산물을 공급하는 면에 있어서는 완전경쟁상태에 있고 수요면에서 상인이나 가공업자는 독점적 경쟁 또는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독점자본의 공세로 언제나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므로 소농적인 생산양식을 띠고 있는 폐지와 소의 경우 농축협의 구관사업을 강화하여 생산력을 판매할 때나 사료 등 생산요소를 구입할 때 이들의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가축시장의 현행 목적에 의한 거간의 중매방법을 지양케 하고 경매방법으로 전환토록 해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경매에 있어서도 중매인의 수를 늘임과 동시에 대량 수요자의 경매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도 대폭 확대하여 구매시장도 완전경쟁시장화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농가문전거래와 유사도매행위를 근절토록 하는 법적조치도 뒤따라야만 한다.

네째, 현행 유통 및 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유통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며 현행 시장수수료와 각종공과금 및 조세를 대폭적으로 하향조절해야 한다.

오늘날 가축시장은 장당 50두 미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수가 전가축시장의 68%이므로 이를 규모의 경제성(Economy of scale)에 맞게 통폐합하고 그 시설을 근대화해야 하며 도축장도 가동률이 극히 저조(소 8.4% 돼지 22.6)함으로 이를 통폐합하여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려고 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가축시장의 중개수수료는 1~2% 도매시장상장시는 40,000원의 수수료와 공과금을 공제하고 있음으로 이를 대폭인하해야 한다.

다섯째, 산지시장과 중앙도매시장 및 소비지시장인 정육점의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경로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 중앙도매시장은 전부 서울에만 존재

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도시외 분산토록 하고 대도시외 도매시장을 신설함과 동시에 식육가공공장을 병설토록 하여 여기서 등급 및 표준화에 따라 부위별로 절단 진공포장하여 소비지의 식육점뿐만 아니라 냉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식품상으로 하여금 판매토록 하여 현재 식육점에서 부위별로 절단 계량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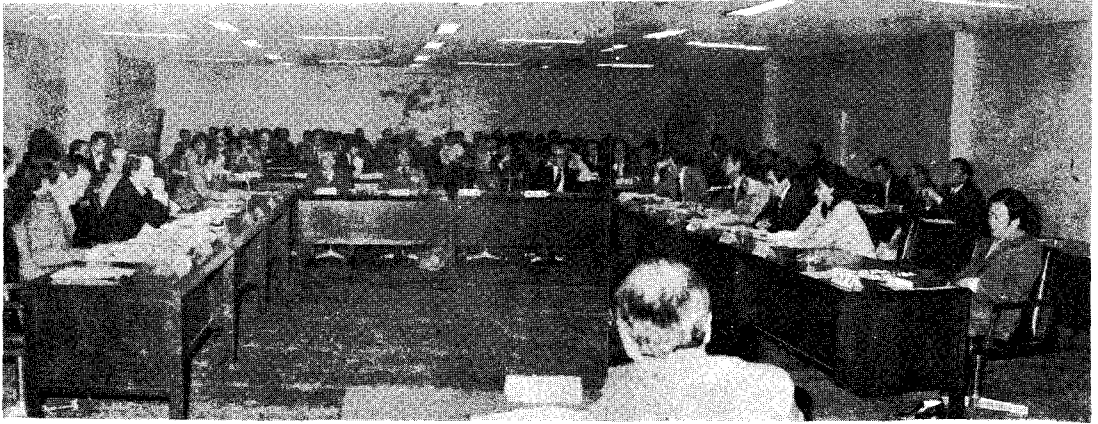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요리형태와 맛에 기준을 둔 현실적인 표준화와 등급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정보와 가격정보를 대폭개선하여 전국시장권을 최대한 완전경쟁화해야 한다.

끝으로 물가당국의 농축산물가격 억제 및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1975년 이후 쇠래를 격화시켰고 이로 인한 농촌과 도시의 커다란 소득격차는 이농현상을 초래케 하였다. 이로 인한 농업인구의 도시집중은 토지의 황폐화와 도시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업자의 수를 증가시켰다.

더우기 1979년의 축산공황은 소의 방매현상을 야기시켰고 이로 인하여 농가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의 절하와 현금소득원을 축소시킴으로서 생산의욕을 크게 저하시킴은 물론 농촌과 축산물생산에 대한 기회현상마저 배태시켰다.

이와 같은 심각한 오늘날의 농촌의 양상을 직시하여 적절한 처방을 하지 않는 한 앞으로 우리 나라 농업은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들에게 이농을 막고 생산의욕을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농적 생산양식을 의식한 강력한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항구적인 농산물의 해외의존은 불가피하게 되고 경제적 자주성은 고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농축산물 가격억제정책이 물가안정에는 다소 도움이 되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농업위기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농업에 대한 뚜렷한「비전」을 가지고 기업농의 측면뿐만 아니라 소농의 측면에서도 생산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보다 차원 높은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내용 발췌



토론의
사회를 맡은

오상락
(서울대 교수)

조춘선(양돈 사육자)...정부가 정책적으로 값싸고 양산이 가능한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인스턴트 식품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여 수급조절 직매장운영을 할수 있게하고 현행 배합사료 정책을 바꾸어 사료공장은 농축사료를 만들어 일반농가에서 자급사료를 이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도록하고 수출의 길을 열어주

고 79년의 수매비축 정책은 농민에 기대감만 주는 양돈 불황의 큰 원인이 되었다.

유윤수(축산단체 연합회장)...축산물은 귀중품이 아니고 주요식품이며 78년의 경우 쇠고기를 수입하여 77년에 비해 40%나 증가 소비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가정소비보다 대중요식업소 소비를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며 축산물도 안보와 같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축산안정기금 사용내역을 발표하는데 찬성한다.

앞으로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것은

1.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산지등 자원을 개발하고
2. 배합사료를 무제한 공급하는 정책에서 유럽식으로 농축사료를 공급해서 자급사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조 춘 선)



(유 윤 수)

3. 정부의 지나친 부업장려를 지양하고 독농가나 전업 양축가 위주로 하며 기업은 산지 개발에 주력토록하고
4.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를 육성하여 교육과 유통개선으로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현재의 어용화된 단체에서 하루빨리 탈피하게 한다.
5. 정부시책의 일관성 유지로 소비자 생산자가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한다.

김천주(주부크럽 중앙회 사무처장)... 작년 우리나라 국민 일인당 고기를 13.1kg 먹었다는데 사실 전체국민이 고르게 이렇게 잘 먹었다가 중요하며 정책 수립시에는 국민과 타협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위에서 끌고가는 자세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가격연동제는 연동제란 가격을 올리는 것이구나로 받아들여지며 정육점 계량기도 믿기 어려워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 정육점을 일정시설만 갖추면 할수 있도록 신고제로 바꾸고 축산관계 단체는 소비자와 손잡고 소비자 교육에 힘쓰고 현재의 쇠고기 선호 경향도 어린아이부터 교육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다.

수입쇠고기는 소비자는 사기가 힘들고 대부분 음식점으로 가고 또 한우고기로 둔갑도 하니 수입 쇠고기도 경락해야 한다. 소비자를 무시한 정책은 무의미하다.



(김 천 주)



(김 권 철)

김권철(농수산부축산과장)...세계 쇠고기 교역량은 75년 238만t에서 78년 306만 9천 톤으로 30%의 교역량이 증가하였고 가격도 76년 7월 878\$에서 79년 6월 2,200\$로 올라 마치 원유파동을 연상케하며 쇠고기는 점

차 부족하여 돈 있어도 살 수 없을때가 올지도 모른다.

농민도 국민인데 이들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가축은 한번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회복에 몇년이 소요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초지조성등 대가축 생산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

농업은 불특정 다수인이 경쟁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함으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며 이번 연동제 실시는 지육은 경락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면서 정육점 소매가격을 묶을수 없어 정상화 한 것이다.

정부도 생산자를 보호하며 싸고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 공급하려고 구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축산이 이제 겨우 발전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으니 적당히 채찍질하여 주시기 바란다.

김성두(조선일보 논설위원)...농수산부의 의견이 경제기획원에 잘 먹혀들어가지 않아 안타까우며 우리가 돈만 있으면 사다 먹어도 이해가 가나 작년말 현재 206억\$의 빚과 무역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손쉽게 수입해 먹고 그 후 우리 자손이 우리가 맛있게 먹은 쇠고기 값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국제수지도 생각해 수입해야 하며 일본과 같은 돈이 있는 나라도 쇠고기 수입을 잘 안하는것이 이런데의 미가 있는게 아닌가 한다.

정부는 축산업자가 창의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유화 해야하며 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예를들면 양고기를 수입한후 잘 안팔리자 TV를 통해 수입 양고기 선전을 하는것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쇠고기 편중 정책을 탈피하여 가격유도로 정책여하에 따라서는 오리고기 등 값싼 다른 고기대체로 쇠고기를 자급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숙희(이대교수, 영양학)...1945년 해방당시 전체 식품중 동물성 식품비율이 2~3%이었는데 현재도 겨우 5%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조사에 의하면 국민 1인당 1~2g 먹는 계



(김성두)



(김숙희)

층이 대부분이며 맨션아파트에 사는(한강 맨션조사) 잘먹는 계층이 60~80g로 되어 있어 이들을 위한 축산물 수입정책이 되어서는 안되고 아직도 성장하는 어린이와 더 먹어야 할 계층이 너무도 많고 국민 영양 측면에서 절대량이 부족한 나라에서 오늘 이곳에 와서 보니 돼지고기 닭고기가 생산과잉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동물성 식품이 모자란 나라에서 남아돈다니 이것은 어른들의 정책 잘못으로 밖에 생각할수 없다.

식성은 일조일식에 바뀔수 없으므로 학교 급식등을 통한 식성교육을 해야하며 우리나라는 너무 금기 식품이 많아 소비자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정책을 수립할때는 광범위하게 횡적인 연결이 잘 되도록 축산외에도 문교 보사 기획원 소비자 단체등과도 협의하여 대단위 정책보다 자세하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

하루 1000~1500gr을 우리가 먹는데 이중 50gr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로 먹도록 해야 할 것이며 대만등이 학생들에게는 우유를 늘 가격의 벌써부터 공급하고 있는 것 등은 우리가 배워야 될것이다.

최종락(경제 기획원 물가 정책 1 과장) ... 쇠고기 수요가 소득 10% 성장에 13%씩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생선 문화권 대만이 돼지고기 문화권인데 비해 우리는 쇠고기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값은 매년 40~50%씩 상승하다 78년 쇠고기 수입으로 2.5%가 하락했는데 소값은 뛰는데 소는 증식이 안되고 있는 형편이다 (년

2.8%증식).

그 주요원인은 농촌기계화로 역우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4.8% 감소)풀이없는 겨울이길기 때문이며 수요 생산에 구조적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쇠고기가 꼭 부유층만 먹는것은 아니므로 국민이 10,000원을 인정하면 이에 따르지만 우선은 농가 생산비를 보장하는 선에서 우선 3천원 전에서 유지해주고 그래도 부족하면 부족분은 수입해서 소비자도 보호해야 한다.

농수산물 수입은 최후에 희생해야 할 문제이며 제일먼저 수입 개방할 문제는 아니다



(최종락)



(송기철)

송기철(고려대학교 상대교수) ...축산 정책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77년 수입정책은 무계획 하였고 정부가 오판하였으며 축산물은 가격 정책외에도 유통구조 가공업, 수요의 개발, 부동산 투기적 축산의 지양, 소비자나 생산자가 직거래 할수있는 제도과 모든일을 까다롭지 않고 손쉽게 할수있도록 민주적인 행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영성한 수급계획과 전면금지 전면개방등의 정책보다 부분적으로 어떤조건하에서 어떻게 한다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성실(한국 기업목장협회 전무이사).... 5년전만해도 축산 행정의 대부분을 국장선에서 전결하였는데 이제 장관선에서 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잘하는 나라의 축산정책은 다음 3가지 목표하에 이루어 지고 있다.

1. 문화 국민으로서 식생활을 하고 필요한 농축산물을 자급한다.

2. 생산된 농축산물은 국제수준으로 사먹을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

3. 농업이 기업으로 성립되고 2.3차 산업 종사자와 대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생산자는 죽고 사료등 유관산업이 치부하고 소비자는 보호도 이익도 없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농민의 희생위에 경제발전이 이루어 졌으므로 이제 정부는 농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현재 생산자 단체는 친목단체 역할밖에 못하여 생산자의 소리가 반영되지않고 생산자의 사정을 파악 못하여 정책수립에 지장이 있다.

그런 가운데도 초지법 개정등 양축가를 위한 큰일을 했는데 이것도 사문화 되지 않도록 뒷받침 되어야 하겠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축산물만 담보상태인데 예로 75년에 송아지값이 20만원 하던것이 4년후 79년에도 20만원하고 있다.

최고기값 연동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생산비가 보장되는 선에서 연동제가 실시되어야 하며 일본같이 송아지값을 고시하고 고시가격 이하가 되면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부국의 척도가 식량자급도에 의해서 측정되며 축산도 쌀생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듯 식량의 개념에 넣어 국가가 투자하여 일차산업이 단단해져야 하고 그위에 2차 3차 산업이 발전하고 2세국민이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축산이 기반조성될때까지 한 5년 소비자들이 좀 참아 주었으면 한다.

권영자(주부)....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는 자본이 축적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강요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 된 후에도 허리띠는 더 졸라매야 되는데 축산업자마저 소비자에게 참으라고 하는데 만일 축산업자들도 자급생산의 기반이 닦아졌을때 넉넉히 싸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최 성 실)



(권 영 자)

지금까지 요식업자가 많이 소비하였고 가정소비는 적었는데 건강을 위해서도 더욱 많이 축산물이 소비되어야 하며, 우수한 축산물을 값싸게 소비자가 구입할수 있도록 정부가 해주어야 하며 외화가 없으면 불요 불급한 파자 사치품의 수입을 우선 줄이고 식료품은 국내 생산기반을 위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족분은 수입해야 하며 정부는 생산자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싸가격으로도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머리가 아프도록 고심해야 한다.

축산물 가격은 소비자 수입과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유통구조 개선으로 중간 마진도 줄이고 가공식품도 개발해야 한다.

양돈업자가 다 망한다고 하고 소도없고 수입도 안하면 소비자는 어떻게 되겠는가?

불란서 속담에 입을 막기 위하여는 먹을것을 주라는 말을 위정자는 명심해야 될것이다.

오봉국(서울대 농대교수).... 하나의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그업에 종사하는사람이 타업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대등한 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정부는 축산도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준후 국제 경쟁력을 따져야 하는데 정부는 농수산 부분에 전체의 10%정도 자금을 배정하고 그중 축산은 최근에와서 3%정도 투자되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또 생산자는 소비자가 싸게 먹도록 계속 노력 하여야 하며 잔칫날 잘먹기 위해 굶을수는 없다.

일본이 축산물자급도가 70%이고 EC가 70%이상 자급도를 유지하는데 우리같이 개발도상국가가 60%(78년) 밖에 되지 않는것은

잘못이며 축산은 안보적 차원에서 기반조성을 하여주고 생산효율을 높여야 하겠다.

축산물 가격정책의 기본방향은 생산성제고, 농가소득증대, 시장안정,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지금까지는 소비자 보호에만 치중된 정책이었다.

또 수급정책도 못사는 나라가 부족하면 먹어야 하겠는데 주어진 금액으로 꼭 쇠고기를 수입해야 되는지는 재고해야되고 값싼 닭고기나 돼지고기로 유도 해야 될것이다.

쇠고기는 값이 비싸도 소의 특수성으로 증식이 어렵고 생산비도 비싸 소비자교육을 하고 요리가공을 잘해서 다양한 식품으로 닭고기 돼지고기를 공급하면 현재 닭고기를 국민 1인당 미국이 25kg를 먹고 우리가 2kg를 먹고 있어 쇠고기 대체가 가능하며 대량생산으로 남았을때 공급기능의 역할을 축진등에서 해주어 기반조성이 되면 모든 문제가 순리로 해결이 가능하다.

현재는 생산 소비 공급을 종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는데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 기능을 수행하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나 가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강력한 생산자 단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오 봉국)



(황 영구)

황영구(종축 개량 협회장) ...신라의 문화는 세계 3대 문화권의 하나 이었는데 그후 불교 유교가 전성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곡 생활로 체력이 약해지고 약소국가가 되었다.

특히 주곡산업은 저장이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대량생산되며 술과 정미소 정도로 2차 가공산업으로 전환도 늦어 2차 산업으로 전

이 빠른 축산이 발전한 나라에 뒤지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나 스위스를 보아도 우리나라는 너무도 조건이 좋으며 단지 정부의 정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쌀 생산량에 대한 포상금이 27억인데 축산 국예산이 최근 증가되어서 20억이라니 이것은 년센스이다.

우리가 연간 사료용 옥수수를 1,800만섬 수입하는데 2천만섬의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방대한 농수산부 예산과 이를 뒷받침하는 농촌진흥청 농업개발공사 농어촌 개발공사 농지개발조합등 많은 기관이 법석을 떠는데 이러한 기본문제 부터 해결해야 한다.

또 축산의 기술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축산에 대한 경제단체가 없는데 축진을 개편하든지 해서 하루빨리 통합정비해서 축산 경제단체를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육성해야 한다.

독일이 2차 대전에 패배한 원인이 육류수급계획을 잘못세웠기 때문이며 EC도 미국의 잉여농산물 수입을 막기위해 생긴것을 보아도 농업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수있다.

중소가축은 번식생리상 파동이 오르락 되어 있으므로 일본이나 미국이 45%~60%를 가공식품으로 이용하는데 이에따른 자금지원을 정부가 가공업체에 하여 주어야 할것이다.

조성환(서강대교수 국제경제학 경제발전론) ... 한나라의 수입정책은 독과점 업체를 컨트롤하기 어려울때나 절대량이 부족할때 수입하는데 주로 공산품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농산품에 주로 적용하고 공산품에는 적용안되고 있다.

축산을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육성하여야 하며 농업은 보호되어야 하며 공산품에 적용하는 원리를 적용하는것은 부당하다.

우리나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는 달리 인구도 많고 큰나라로 식량을 자급해야 하는 나라이다.

이제 잉여농산물도 돈주고 사오는 형이지 저저 얻어오는것은 아니다.

산업이 외부효과가 큰것일수록 보호가 필

요한 것이다. 고용 소득 식량자급 공업원료 식량무기화 에너지코스트가 올라 앞으로는 미국의 농업이 반드시 우위라고만 할수없으며 에너지 절약면에서도 후진국도 농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이런 뜻에서 비교우위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조 성 환)



(윤 희 진)

윤희진(제일 중축 농장장) ... 정부의 가격 정책으로 닭고기 돼지고기 소비를 증가시켜야 하며 정부의 통계자료를 공개해서 일반사육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영철(농협 중앙회 조사부차장) ... 축산물 가격은 시장기능에 맡겨야하며 정부의 관여는 물량이 커져서 오히려 손실이 많다.

정부는 가격기능이 잘 안될때 이를 해결하여주는 역할만 하여야 한다.

또 정부가 농민을 아무리 철저히 보호하여도 지나침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더 지나칠 정도로 농민은 보호되어야 한다.

현재 30%의 농민이 GNP의 20%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농민을 보호해야 된다는것은 명백하며 이런 의미에서 축산은 철저히 보호 되어야 한다.

박혜경(숙대교수 경제학) ...물가가 안정되어야 임금도 안정되고 수출도 계속 되어진다. 쇠고기 가격 인상으로 타육류로 대체는 일시적이라고 보며 쇠고기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아 돼지, 닭도 따라서 오르고 물가인상의 요인이 되고 하는 악순환이 되기 쉽다.

수입이 바람직 하지는 않지만 물가안정이 필요하다.



(김 영 철)



(안 충 영)

안충영(중앙대교수 경제학) ...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축산에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

지난 18년간 정부의 정책은 농업부분의 실업자를 수출주도형 공업이 흡수하는 것으로 고용확대를 가져오고 부가 가치를 확대한다는 것이었는데 설득력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환점에 이르렀다.

1. 무한대의 가능한 노동공급력이 기능인력수요에 걸리고.

2. 175억\$ 수출중 식유수입에 70억\$을 사용하여 국제수지 압박이 커져 산업구조 재편성이 숙명적이며 에너지 절약산업으로 해야하고

3. 재벌기업 집중화 현상이 사회문제화 하고 있고 소득분배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여 기본적 발전전략을 재편성해야 한다.

이제 고용 성장의 가치위에 형평의 가치가 부여 되어야 한다.

4 차 5 개년기간 소외된 부분인 농업(정부투자 9%이하)이 발전하여(GNP 기여율 23-25%) 내수를 진작하고 국내자원 활용 산업으로 농업은 필요하다.

이제 축산은 기간산업으로 정책당국이 알아야 하며 초지 야산개발 에너지 절약산업으로 축산은 합당하다. 수급구조의 불균형 문제는 기반조성이 낙후되었기 때문이며 과거 18년간 누적되어온 결과이다.

미국이나 일본같이 우리도 식품가공 비축에 투자해야 하며 가격을 자율화해서 축산물간에 대체 할수있게 해야 한다. 형평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낙후된 농업에 투자 해야 한다.

(文責 記者 있음)